

일본출장 주요 결과 및 시사점

- ① 7.21~23일간 일본을 방문하여, 일본 내각부 저출산 담당대신 면담, 정부 및 민간연구소 전문가 등을 면담하여,
- 일본의 저출산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하고, 저출산 문제 및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음
 - * 방문지 : 일본 내각부 소자화특무대신 예방, 사회보장·인구문제연구소, 경제산업연구소, 와세다대학, GRIPS 정책대학원대학
 - * 방문자 : 장영철 단장, 권병기 과장, 손주영 복지부 사무관, 신윤정 보사연 연구위원
- ② 일본은 최근 저출산 관련 정책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바, 기존의 "근로여성에 대한 양육지원" 중심의 대응방향에서 "work and life balance"를 강조하고, "결혼 문제"에 대한 고려를 본격화
- 특히, 오부치 장관을 포함한 면담자 모두 "work life balance"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, 근로환경의 유연성, 남성의 가정에서의 역할 강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향후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
 - 이러한 정책방향 선회에는 20년간의 저출산 대책 추진경험과 그간의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부의 재정투입이 어려운 현실 등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 - 특히, 경제산업성 산하 경제산업연구소의 "가임여성 패널연구" 결과에 의하면, 양육지원은 3째 자녀 이후의 자녀출산에 효과적인 반면,
 -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는 근로환경의 유연성, 가정내 양육 부담의 분담(특히, 첫째 양육시 여성의 양육부담의 경험) 등 일과 가정의 조화 문제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오부치 장관도 work life balance와 “인식개선”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, 이를 위해 앞으로는 특히 여성보다는 "남성의 문제" 해결이 중요함을 지적
 - 과거 10년간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 노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, 이에 따라 여성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반면, 남성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,
 - 남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
- 다만, work life balance가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일본 정부나 관계전문가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,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이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,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됨
- 일본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“미혼, 만혼 등 결혼 문제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
 -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분석에 의하면, 합계출산율이 2명 전후인 미국, 프랑스, 스웨덴의 경우 정식 결혼가정내 합계출산율은 일본이나 한국보다 낮은 반면, 사실혼 등 혼외 출산율이 매우 높음
 - 일본과 한국의 사회여건은 결혼이 전제되어야만 출산이 가능하므로,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인식
 - 다만, 이를 위한 해법도 결국 "work life balance"와 “인식개선”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임
 - 오부치 장관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 개선 및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

- 특히, 일본여성의 90%가 결혼을 원하고 2명의 자녀를 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, 이 경우 합계출산율이 1.75는 되어야 하는데, 1.3 내외에 그치는 원인을 잘 파악해서 대응해야 함을 언급

○ 한편, 와세다 대학의 고지마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인식개선 노력이 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

- 최근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여, 국민들이 이에 대한 “집단기억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,
- 프랑스의 경우도 100여년 이상 저출산 대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의식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던 점을 참고하도록 조언

③ 일본정부의 저출산 대응에 있어 특기할 점은 저출산 문제를 "사회·복지적 관점"뿐만 아니라, 일본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"인구 또는 노동력의 문제"로 접근하면서, 이러한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강구에 경제부처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임

○ 일례로, 경제산업성 직속 경제산업연구소의 경우 정부(주로 경제산업성)가 의뢰한 4대 정책연구영역(policy research domains) 중 첫 번째 연구영역이 저출산과 관련된 주제*였으며,

* 1st Policy domain : Maintaining Economic Dynamisam under Adverse Conditions of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

- 저출산 연구를 위해 고령화 관련 data set은 30년, 가임여성에 대한 패널데이터는 10년간의 자료를 구축하여, 이를 기초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었음

* 앞서 언급한 양육지원정책의 효과, 첫째·둘째·세째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영향의 정도 등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장기간의 패널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, 이외에 다양하고 흥미있는 연구결과 제시

④ 향후 저출산 관련 국제세미나 추진 및 여러 분야에서의 국외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도 같이 논의하였음

- 미래기획단장은 GRIPS 정책대학원대학측에 대해 저출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관계를 모색했으면 좋겠고, 이를 위해 활발한 인적교류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으며,
 - 이에 대해 히타 학장은 대학에 객원연구원 제도가 있으므로 MOU체결 없이도 인적교류 등이 가능할 것임을 언급
 - 미래기획단장은 관계 부처에 GRIPS를 소개하는 한편, 국장급 공무원의 직무연수 파견제도 활용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함
- 경제산업연구소,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측과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소개하고 논의하고 싶다는 약속을 받았으며,
 - 한국, 일본, 싱가포르의 저출산 관련 비교연구를 하고있는 와세다대학교지마 교수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방문 의사 피력
- 오부치 장관 예방시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한일 양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, 예방 하루 전 중의원이 해산된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음

⑤ 2박3일간의 일본 출장 결과, 저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외국의 정책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,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 인식

- 특히 정책의 실제 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외국의 정책추진 경험과 장기간에 걸친 연구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
- 저출산이 경제와 직결된 인구문제라는 점에 대해 우리정부 특히, 경제부처의 보다 치열한 인식과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촉구할 필요